【 2015.09.25(금) 건설경제 】

#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 계약체결 후라도 지급해야

## 권익위, 발주 공공기관에 권고 비정상 관행 개선 계기될 듯

A공기업은 553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을 잘못한 채로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법정경비 일부 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 등을 빠뜨린 것이다.

B건설사는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A공기업이 산정한 공사원가에 따라 입찰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B사는 공사 설계서를 검토하던 중 공사원가에 22억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A공기업은 원가계산 시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소 반영된 건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사원가 항목을 누락해 공사비를 산정한 상태로 체결한 계약이라면 나중에라도 '법정경비' 만큼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정경비란 '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환경보존비' 등 건설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공사 원가에 반드시 반영토록 규정한 경비다.

권익위는 B건설사의 민원을 받고, A공기업이 공사원가에 '재료비'와 노무비만 반영했고, 법정 일부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그 후 이 중 최소한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정경비 약 5억6000만원은 계약 체결 후라도 반영하라고 A공기업에 권고했다.

현재 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은 발주자가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사원가에 경비·일반관리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발주기관의 관행이었다"면서 "이번 권고로 그간의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당사자 간 계약관련 분쟁 해소를 주로 법원 판결에 의존함에 따라 해결이 장기화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기업고충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관련한 계약분쟁 처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윤석기자 ysys@

# 건설업계, 청년고용 확대 앞장

## 건협, 청년희망펀드 캠페인… 채용목표 상향 등 유도

건설업계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청년희망펀드' 참여와 청년고용 확대에 나선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사진)는 24일 건설기업의 '청년희망펀드' 참여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 청년희망펀드'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청년희망펀드를 계기로 건설업계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앞서 지난달 19일 개최한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에서도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또 건설사 공동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의 건설사 취업 지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회원사인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동시에 건설사들의 채용 목표 인원 상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설사에는 신규 청년직원 채용을 늘리도록 홍보하는 한편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건설협회는 이를 위해 먼저 회원사에 캠페인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동시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개 회원단체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9개 건설 유관단체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삼규 건협 회장은 이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건협 임직원 가운데 희망자들도 가입을 신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청년 초급기술자 배치 의무화와 청년 기술자 참여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등을 포함한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이상기류'

## 예타 1차 점검회의서 비용·수요분석 논의 없어 올해 넘기면 선거 정국 돌입… '장기표류' 우려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공약 사항으로 도민 전체가 기대를 걸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결과는 강원도가 기대한 수준을 밑돌았다.

무엇보다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비용분석(B/C)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분석이 지연됐다는 이유에서다. 회의에서는 비용분석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교환했다.

이로 인해 도내 일각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면피용 회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1차 점검 회의는 지난 3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재부의 늑장 추진으로 도내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서는 이번 사업추진이 물건너 갈 경우 사업은 또다시 장기표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번째 예타를 진행하는 전국 유일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지나고 선거국면으로 이어지면 장기과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KDI의 수요분석 지연 상황 및 비용절감 노력이 전무한 분석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2차 점검회의를 비용분석과 수요분석 결과를 포함시켜 앞당겨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대안노선 활성화 용역결과 비용분석이 0.97로 나온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부 용역결과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철저한 기술적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 방문협의 활동을 맨투맨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40~50%), 정책적 판단(25~35%), 지역낙후도 및 균형발전(20~30%)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도는 취약한 경제성을 40%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항목의 비율을 30%씩 반영할 경우 정책종합분석(AHP)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향후 동해북부선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및 북극항로로 연결돼 러시아·유럽·중국과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올림픽 로드로서 자원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라며 "전략적·조직적으로 적극 대응해 예타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회훈기자 hoony@

# 강원도, 투자이민제 확대 추진

## 올림픽 특구 전역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도를 확대 추진하면서 도내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강릉시의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전 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이민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시설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이들에게 자유로운 거주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2013년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처음 도입됐다.

도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 자본의 유치를 발판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산이다.

이미 차이나 드림시티가 들어설 강릉 정동진 특구의 경우 투자이민제도 지정에 들어갔다. 강릉시는 지난 22일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 대상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은 중국 자본인 샹차홀딩스가 이 일원 50만㎡ 부지에 2017년까지 4873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7만1483㎡ 규모의 콘도미니엄 695실, 호텔 214실 등 관광·휴양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이 업체가 분양하는 5억원 이상의 콘도 등을 매입하면 영주권을 분양받게 된다.

도는 중국 투자자들의 경우 자본투자와 관련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영주권을 기본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 올림픽 특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은 90% 가까이 민자로 추진되는 만큼 외자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투자이민제 확대는 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